

## 「韓國石炭產業의 現況과 構造改善方案」：應答

金 址 鴻

\*

全永瑞박사의 論評은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전반부에서는 海外不安要因(에너지波動)을 고려하여 國內石炭需要를 政策變數로 할 경우와 石炭生產을 정책변수로 한다고 假定을 바꾸었을 경우를 비교하였고(式 4와 式 7의 비교), 후반부에서는 國內石炭產業에 海外로부터의 競爭을 도입시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全박사의 두가지 부분에 대한 論評에 대하여 應答하려고 한다.

첫째 부문에서 全永瑞박사의 분석은 國내石炭消費抑制가 없으며 價格決定은 정부개입 없이 완전히 市場機能에 따라 결정되고 供給量( $X't$ 와  $m$ )이 政策變數라는 Cournot-Nash 가정하에서, (1)石炭輸入을 완전 자유화할 경우

와 (2)石炭輸入쿼타( $\bar{m}$ )가 있을 경우에 대해 모델을 전개하였다. 반면 本人의 목적은 開放經濟下에서 海外不安要因(예: 에너지波動)을 고려할 때 國내石炭消費水準을 미리  $Q^*$ 수준으로 억제하였을 경우 最適 國내生產量( $X't$ ) 또는 國내炭礦의 適正限界生產費用을 決定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全박사의 경우는  $Q$ 를  $X't + m$ (輸入制限 없는 경우)와  $X't + \bar{m}$ (輸入量制限 경우)으로 置換하여 最適條件를 구한 것이고, 本人의 경우는  $Q^*$ 가 外生的(예를 들면 에너지相對價格에 의해)으로 決定되고 거기에 대해 最適  $X't$ 와  $m$ 을 決定하는 모델인 것이다.

全박사와 本人은 서로 다른 假定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全박사의 假定도 그 자체로서 有意性이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政策研究所立場에서는 모델의 기준을 그假定이 얼마나 現實的이냐, 그리고 얼마나 政策的 意味가 있느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韓國의 현실에서 煉炭과 무연탄을 포함한 대부분의 에너지價格을 政府가 오랜기간

통제하고 있으며, 또한 무연탄 供給量에 대해서도 政府의介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政府가 告示하는 煤炭, 石油, LPG價格을 포함한 에너지 相對價格에 의해 무연탄의 需要水準( $Q^*$ )이決定되게 된다. 全 박사의 모델과 그에 따른 政策代案이 現實的인 意味가 있기 위해서는, 우선 國內 煤炭과 무연탄價格이 政府介入 없이 市場機能에 따라決定된다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현실적으로 全 박사의 提言에 따라 國內石炭의 限界費用( $f'$ )을 기준으로 국내무연탄 價格을決定할 경우, 國內炭보다 原價가 저렴한 輸入炭은 더 많은 마진을 얻게 될 것이다. 더구나 炭度深部化와 賃金上昇 등에 의하여 限界費用( $f'$ )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므로,  $\alpha$ 요소가 일정하다고 할 경우, 全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무연탄의 國내價格은 계속 올라 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무연탄 輸入業者는 더욱 많은 이익을 얻게 되며, 대부분 서민층인 무연탄 消費者는 점점 비싼 價格을 지불하게 되어, 社會的公平性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며, 또한 國내에는 國際競爭力이 없는 탄광이 많이 생기게 되어 資源의 効率的配分을 歪曲하게 될 우려가 있다.

둘째 부문에서 全 박사는 (1)換率變動에 따른 不確實性 (2)民營炭礦의 廢礦 (3)國內賦存資源의 最大活用 不可能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 무연탄 國내輸入價格은 크게 보면 무연탄 國際價格과 換率에 의해 결정된다. 全 박사는 換率의 不確實性에 대해 걱정하였으나 1980년대의 경험에 의하면 換率要素보다는 무연탄 國際價格이 더 不確實性이 크다(예: 톤당 \$66

對 \$42). 또한 全 박사의 論理와는 반대로, 國內輸入價格으로 換算할 경우 換率이 무연탄 國際價格의 變動의 폭을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 실제로 1980년초에서 1985년까지 무연탄 國際價格은 하락하였으나 원貨의 平價切下에 의해 國내輸入價格의 变동폭이 줄어들었다. 不確實性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換率變動趨勢를 政府가 인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經濟歪曲現象이 더 큰 非效率性和不公平性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石油價格은 換率切上을 반영하여 國내石油價格을 낮추면서 石炭價格은 換率切上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本人의 論文에서 지적하였듯이 換率切上의 受惠者는 결국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고, 煤炭을 주로 쓰는 서민층은 換率切上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2) 輸入炭이 도입될 경우 民營炭礦의 廢礦可能性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르는 政治的, 社會的問題가 수반되리라 예측된다. 本人의 모델의 목적이 開放經濟下에서의 石炭政策의 방향을 제시한 것인지 國내石炭產業을 완전히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며, 調整過程에서 발생할 수 있는 政治的, 社會的問題點에 대한 구체적인 代案에 대해서 本人의 論文의 여러 부문에서 說明하고 있다. 예를 들면 國내石炭價格의 급격한 變化에 따른 충격을 피하고 社會的摩擦을最少化하기 위해 國내價格을 수년에 걸쳐 조정하여 國際價格에 접근시키는 방안과 그 과정에서 炭礦產業이適應을 할 수 있도록 政府가 도움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全 박사의 提言대로 限界生產費用을 기준으로 삼아 國내石炭價格을 계속하여 올린다면, 현재의 에너지 相對價格構造(예: 動資部 자료에 의하면 1988년 11월

기준 연탄의 輕油對比 연탄사용 不便費用考慮時 經濟性은 1 : 0.84)와 所得水準 上昇趨勢를 감안할 경우 石炭의 需要減退를 더욱 촉진하여, 오히려 國內炭礦이 廢礦하게 되는 것을 加速화할 가능성이 있다.

(3)全박사가 주장한 國內賦存資源(무연탄)의 最大限 活用이라는 政策目標가 70년대와 80년대초까지는 옳은 이야기일는지는 모르나, 100億달러 이상의 經常收支黑字로 흑자관리에 고민하는 현 시점에 와서도 政府의 중요한 政策目標인지는 의심이 간다. 만약 무연탄이 消耗性資源이 아니고, 아직 慢性的 外換不足狀態이고, 정책입안자의 考慮期間(time horizon)

이 現世代까지만이라면 全박사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연탄은 他製造業이나 農業과는 달리 消耗性資源이며 韓國에는 一定埋藏量만 있다. 本人의 論文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現世代가 埋藏量을 모두 消費한다면 다음 世代는 제3의 에너지波動을 당할 경우 지금 世代에 비해 훨씬 불리한 위치에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現 經濟與件과 주어진 一定量의 資源의 世代間 適正消費를 생각할 때 消耗性 國內賦存資源의 最大限 活用이 중요한 政策目標라는 全박사의 주장은 國內外 經濟與件變化에 따라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